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2010. 5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관실

1. 의결주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조문별 적용대상 동물 등에 따라 조문의 순서·분류를 체계화하고, 현행 법률의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피학대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및 동물학대행위 벌칙 강화,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 등 동물보호·복지수준 향상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신설·정비하여 법의 실효성 확보수단을 확충하고 영업자 관련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영업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조문의 순서 및 분류를 체계화함

- 1) 업무 및 규정별 적용대상에 따라 조문 순서·분류 등을 정비할 필요성이 있음.
- 2) 조문을 적용대상 동물 및 업무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비함으

로써 동물의 보호·관리가 효율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기대됨.

나. 동물실험 및 영업 등에 대한 정의 신설(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동물실험”, “동물실험시행기관”, “영업” 및 “영업자”를 추가하여 동물실험과 관련 시설의 범위, 종류 등에 대한 해석상 혼란을 해소하고, 영업에 대한 정의와 범위를 명확히 함.

다. 법률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 명확화(안 제5조)

- 1) 「야생동·식물보호법」, 「문화재보호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야생동물, 천연기념물 동물, 해양포유동물(고래, 물개 등) 등이 보호받고 있으나, 「동물보호법」에서는 이 모든 동물을 보호대상으로 하고 있어 동물보호 관련 업무를 시행할 때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는 등 관련 문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동물보호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개별법에서 보호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 동물의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대상 범위에서 제외 함.
- 3) 이와 같이 적용대상 동물의 범위가 명확해 짐에 따라 동물보호정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라.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의무화(안 제13조)

- 1) 등록대상동물(개)의 유실(遺失) 및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

해 동물등록제를 도입하였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동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2)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물등록제가 시행될 수 있도록 본 규정을 의무화하되 동물등록제 시행의 필요성이 적은 지역에 대하여는 시·도지사가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등록제가 전국단위로 시행됨에 따라 동물의 소유자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더라도 해당 동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으며, 동물소유자의 책임의식 강화 등으로 유기동물 발생두수가 감소하고 유실동물의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등록대상동물의 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피학대 동물에 대한 구조·보호조치의 강화(안 제14조 및 제18조부터 제22조까지)

- 1) 현행 「동물보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유기동물만을 보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걱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는 동물의 보호와 학대행위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등이 없는 문제점이 있음.
- 2) 소유자등으로부터 학대를 받아 치료·보호를 받아야 하는 동물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학대행

위 재발방지를 위해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을 해당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함.

3) 동물의 소유자가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할 경우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유권을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하여 동물을 적정하게 사육·관리할 수 있는 동물애호자 등에게 입양할 수 있도록 함.

4) 학대받는 동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함으로써 학대행위의 재발이 방지되고,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 발견 시 신고의무 규정 신설(안 제16조)

1) 동물의 학대방지 및 유실·유기동물의 신속한 보호조치 이행 등을 위하여 관련 동물을 발견할 경우 일반국민들이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함

2)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을 발견하였을 경우 일반국민에게는 신고의 자유를 보장하고, 동물보호단체의 회원 등 일정한 신분이 있는 자들에게는 신고의 의무를 부과함.

3) 신고규정이 신설되어 피학대 및 유실·유기동물의 적절한 보호조치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유실동물이 소유자에게 반환되는 비율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사. 동물의 인도적인 처리에 관한 규정 강화(안 제23조)

1) 현행법은 유기동물에 대하여 질병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인도적인 방법으로 동물을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기관과 인도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2)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한해 인도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도록 함.

3) 동물을 인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등을 일정 자격을 가진 자 등으로 규정함으로써 동물생명의 존엄성이 제고되고, 해당 조치행위의 무분별한 시행 및 무자격자에 의해 발생할 동물의 고통 등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아.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관리·감독 강화(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 등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으나, 동 위원회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약한 문제점 등이 있음.

2)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효과적으로 감독하기 위해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동 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에 대한 심의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자격기준을 강화함.

- 3)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동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도록 하고, 위원회의 구성·운영상에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개선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 4) 동물실험윤리위원회에 대한 지도·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무분별한 동물실험이 억제되고 실험동물이 보다 윤리적으로 취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동물복지형 축산농장 인증제 도입(안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

- 1)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의 보호와 사육과정에서의 복지증진 등을 위한 규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2) 농림수산식품부가 해당 동물의 보호와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고, 동 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해 동물복지 증진 등을 위해 필요한 축사시설 개선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3) 동물복지 등을 실천하는 축산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동 제도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축산농가가 확산되어 축산농장에서 사육되는 동물의 복지가 제고되고, 동물복지형 축산식품 생산기반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안 제33조)

- 1) 등록대상동물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영업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함.
- 3) 영업등록제를 신고제로 완화하여 행정의 능률성이 확보되고, 영업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카. 교육대상자 합리화 및 영업종사자에 대한 교육의무 폐지(안 제37조)

- 1) '10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영업·종사자 등 법정교육제도 합리화 방안」(총리실)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교육대상자들의 부담경감 등을 위해 현행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 2) 등록대상동물 관련 영업자와 그 종사자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하던 조항을 삭제하고, 해당 영업을 하려는 자와 그 영업행위를 하다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에게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함.
- 3) 교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육대상자의 부담이 경감되고, 교육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타. 동물학대 및 금지된 동물실험행위에 대한 벌칙 강화(안 제 46조)

- 1) 동물을 학대하거나 실험금지대상 동물을 실험에 이용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문제점이 있음.
- 2)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벌칙 수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동물학대행위를 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실험금지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을 상향 조정함.
- 3) 벌칙 규정이 강화되어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가 방지되고, 실험금지 동물(유실·유기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등)의 보호 등에 대한 법적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파. 그 밖에 현행 규정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

- 1)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 등을 위해 실험금지 대상동물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함.
- 2)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시키고 입양 후에도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동물애호자 등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해당 동물을 입양하는 자에게 불임수술 등

사육·관리 등의 필요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3) 영업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행정처분 효과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상속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자 행정처분의 효과도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4) '09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과태료·과징금 세부징비기준」(법제처 등)이 마련되었으며, 이를 반영하고 영업자의 부담 및 과태료·영업정지 중복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과태료 규정에 이미 있는 사항은 영업자의 행정처분 규정에서 삭제함.
- 5)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지방자치단체장이 필요할 경우 동물보호전문기관 등 관계기관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당해 시설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할 수 있게 하고,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등 동물보호 관련 실적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6)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그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명예감시관의 직무를 행한 자에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7) 과태료 규정의 실효성 제고 및 「야생동·식물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과태료 수준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최고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개별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법률 제 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4.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5. “동물실험시행기관”이라 함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영업”이라 함은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해당 동물의 번식 및 사육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 또는 등록대상동물의 장례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

7. “영업자”라 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자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 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적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른 야생동물
2.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천연기념물인 동물
3.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포유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

제2장 동물의 보호

제1절 총칙

제6조(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③ 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취득·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죽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등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동물의 운송) ① 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
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도로 되어 있을 것
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떨어진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②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① 「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電殺法)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0조(동물의 수술) 거세·제각(除角)·단미(斷尾)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11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③ 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 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도록 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결과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2절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한한다)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사육·관리되는 등록대상동물을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동물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을 양수한 자도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자료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절차,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등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의 조례로 정한다.

제3절 동물의 구조·보호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6조에 따라 치료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홀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농림수산물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동물의 구조·치료·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보호중인 동물을 제6조에 따라 적정하게 치료·보호하지 않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센터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관련기관 등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지정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6조(신고의무) ①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대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

른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업자와 그에 고용되어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관련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7.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에 고용되어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공고)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제22조에 따라 입양될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의 기

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그 동물이 제23조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제18조(동물의 반환)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로 확인되어 동물 소유자등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치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

등을 알 수 없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동물을 처음 보호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

제21조(보호비용의 면제)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

제22조(동물의 입양·기증) ① 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절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애호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한해 입양시키거나 기증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입양하거나 기증받는 자에게 불임수술 및 적절한 사육·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입양·기증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23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질병 등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제24조(실험금지 동물)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 중(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

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등록) ①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

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회의 폐지·휴지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로 동물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2.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자
 3.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
 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이나 동물보호·복지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자
 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
- ③ 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 ④ 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종사하거나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제27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1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등

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제4장 동물복지농장의 인증

제29조(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인증)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농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
2. 동물복지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동물복지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축산단체, 동물보

호단체는 동물복지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⑤ 동물복지농장의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인증의 유효기간) ① 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 운영하려는 상속인
2.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② 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영업

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등록대상동물과 관련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1. 동물생산업
2. 동물수입업
3. 동물판매업
4. 동물장묘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영업의 신고) ①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농림수산물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영업의 등록) ①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물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영업의 승계) ①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

②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7조(교육) ① 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그 영업행위를 하다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해당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38조(등록취소 등)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
3.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营业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장 보칙

제39조(출입·검사 등) ①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2.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 받은 자
4.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
- ④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

1. 출입·검사목적
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
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
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
5. 제출할 자료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0조(동물보호감시관)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무와 그 밖에 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동물보호감시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관)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시관”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자격·위촉·직무·활동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명예감시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명예감시관이 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명예감시관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증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⑥ 명예감시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

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물
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
2.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
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
4.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
자 하는 자
5.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

제43조(권한의 위임) ①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
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4조(실적보고)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
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②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
관의 장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농림수산
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
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업무와 관련
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수산물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
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
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4.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5.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제7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자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자
3.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9.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1.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13.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6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2. 제12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④ 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5항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고시나 그 밖의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각종 등록이나 그 밖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시설로 지정된 관계 기관은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동물을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것으로 본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5조에 따른 동물 실험윤리위원회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에 두고 있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
2. 제2조제5호에 따른 동물실험시행기관에서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위원회의 구성이

제26조에 합치되는 경우에 한한다)

⑤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이 법의 시행일로부터 계산한다.

⑥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등록대상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을 하는 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⑦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하는 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⑧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동물보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신 설></p> <p>제1조(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 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동물”이라 함은 소·말·돼지·개·고양이·토끼·닭·오리·산양·면양·사슴·여우·밍크 등 척추동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2. “등록대상동물”이라 함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p> <p>3. “소유자등”이라 함은 동물의 소유자와 소유자를 위하여 동물의 사육·관리 또는 보호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u>제1장 총칙</u></p> <p>제1조(목적) (현행과 같음)</p> <p>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p> <p>1. (현행과 같음)</p> <p>2. (현행과 같음)</p> <p>3. (현행과 같음)</p> <p>4. “<u>동물실험</u>”이라 함은 <u>교육·시험·연구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u></p> <p>5. “<u>동물실험시행기관</u>”이라 함은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기관·법인 또는 단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p> <p>6. “<u>영업</u>”이라 함은 <u>등록대상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해당</u></p>

<p><신 설></p> <p>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함에 있어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그 동물이 본래의 습성과 신체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구역안의 동물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p> <p>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에 대하여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 그 밖에 이와 관련된 활동을 권장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p> <p>③모든 국민은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는 등 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p> <p><u>제18조(적용의 제한) <신 설></u></p>	<p>동물의 번식 및 사육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 또는 등록대상동물의 <u>장폐식장·화장장·납골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업을 말한다.</u></p> <p>7. “<u>영업자</u>”라 함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u>영업신고</u>를 한 자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u>영업등록</u>을 한 자를 말한다.</p> <p>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현행과 같음)</p> <p>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현행과 같음)</p> <p><u>제5조(적용의 제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u></p> <p>1. 「<u>야생동·식물보호법</u>」에 따른 <u>야생동물</u></p> <p>2. 「<u>문화재보호법</u>」에 따른 <u>천연기념물인 동물</u></p> <p>3. 「<u>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u></p>
--	--

<p>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p>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가축을 식용 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p> <p>2. 「야생동·식물보호법」에 따라 수렵하는 경우</p> <p>3.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천연기념물동물의 치료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p> <p>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조치를 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 style="text-align: center;"><신 설></p> <p>제6조(적정한 사육·관리) ①소유자들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의 급여와 급수·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②소유자들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한 치료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③소유자들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동물을 다른 동물우리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④소유자들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들의 성명·주소 등이 표시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p> <p>⑤소유자들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p>	<p style="text-align: center;">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포유동물</p> <p>②(현행과 같음)</p> <p>1. 「축산물가공처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을 식용목적으로 도살하는 경우 (삭 제)</p> <p>(삭 제)</p> <p>2. 그 밖에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관련 조치를 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제2장 동물의 보호</p> <p style="text-align: center;">제1절 총칙</p> <p>제6조(동물의 적정한 사육·관리) ① (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	---

<p>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p> <p>⑥시·도지사는 등록대상동물의 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⑦그 밖에 동물의 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p> <p>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p> <p>3.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p> <p>②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1. 도구·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질병의 치료 및 동물실험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p>	<p>(삭 제)</p> <p>④(현행과 같음)</p> <p>제7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현행과 같음)</p> <p>②(현행과 같음)</p>
--	---

<p>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3. 도박·광고·오락·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다만, 민속경기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p> <p>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p> <p>③누구든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질병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도적인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p> <p>④소유자들은 동물을 유기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8조(동물의 운송) ①동물을 운송하는 자 중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1. 운송 중에 있는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급격한 출발·제동 등으로 충격과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운전에 유의할 것</p> <p>2. 사용하는 차량은 동물이 운송 중에 상해를 입지 아니하고 급격한 체온변화, 호흡곤란 등으로 인한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을 것</p> <p>3. 병들거나 어린 동물 및 임신 중이거나 젖먹이새끼가 딸린 동물을 운송할 때에는 함께 운송 중인 다른 동물에 의하여 상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칸막이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p> <p>②농림수산물부령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동물운송차량의 구</p>	<p>③누구든지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보호조치의 대상이 되는 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을 포획하여 취득·양도·양수하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되며, 죽여서는 아니 된다.</p> <p>④ (현행과 같음)</p> <p>제8조(동물의 운송) (현행과 같음)</p>	<p>조 및 설비기준을 정하고 이에 적합한 차량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p> <p>③농림수산물부령은 그 밖에 동물 운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p> <p>제11조(동물의 도살방법) ①「축산물가공처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에는 가스법·전살법(전살법) 등 농림수산물부령이 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고통을 최소화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의 경우 외에도 동물을 죽이지 아니하면 아니되는 경우에는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제12조(동물의 수술) 거세·제각(제각)·단미(단미) 등 동물에 대한 외과적 수술을 하는 자는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야 한다.</p> <p>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동물실험은 인류의 복지의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p> <p>②동물실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p> <p>③동물실험은 실험에 사용하는 동물(이하 "실험동물"이라 한다)의 윤리적 취급과 과학적 사용에 관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자가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최소한의 동물을 사용하여야 한다.</p> <p>④실험동물의 고통이 수반되는 실험은 감각능력이 낮은 동물을 사용하고 진통·진정·마취제의 사용 등 수의학적 방법에 따라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9조(동물의 도살방법) (현행과 같음)</p> <p>제10조(동물의 수술) (현행과 같음)</p> <p>제11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현행과 같음)</p>
--	---	---	--

⑤ 동물실험을 행한 자는 그 실험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당해 동물을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동물이 회복될 수 없거나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으며 살아야 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한 한 빨리 고통을 주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 사육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신 설>

<신 설>

⑤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절 등록대상동물의 관리

제12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하는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부착시켜야 하며 인식표가 없이 돌아다니는 등록대상동물은 유기된 것으로 본다.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평상·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에 한한다)이 생긴 때에는 즉시 이를 수거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은 등록대상동물의 유실·유기 또는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

제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遺棄)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닌 곳에 있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일정 시설에서 사육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이 위치한 곳을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등록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시장·군수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게 하는 경우 등록하여야 하는 동물의 범위, 등록방법, 등록사항과 절차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는 바에 따라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동물에 대하여 예방접종을 하게 하거나 특정 지역 또는 장소에서의 사육 또는 출입을 제한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주택에서 사육·관리되는 등록대상동물을 그 소유자등으로 하여금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동물의 월령이 3개월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등록된 동물의 소유자등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동물을 양수한 자도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⑤ 등록대상동물의 등록방법·절차, 등록사항 및 변경신고 등 그 밖에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

제외하고는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한다.	다.
<신 설>	제3절 동물의 구조·보호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시·장·군수는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나돌아 다니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이 제6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6조에 따라 치료하거나 보호하여야 한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홀로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이하 "유실·유기동물"이라 한다) 2. 제7조제2항에 따라 학대받은 동물(이하 "피학대 동물"이라 한다) 중 소유자를 알 수 없는 동물 3. 피학대 동물 중 소유자로부터 제7조제2항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신 설>	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삭 제)
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	(삭 제)

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삭 제)
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삭 제)
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보호시설의 설치 등) ①시·도지사는 보호조치를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이하 "보호시설"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하거나 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는 시설(이하 "위탁보호시설"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제14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치료·보호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관련기관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가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하는 경우 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동물의 구조·치료·보호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보호시설의 설치·운영 또는 보호조치의 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④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동물보호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4. 보호중인 동물을 제6조에 따라

<신 설>	적정하게 치료·보호하지 않거나 제23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 보호센터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 설>	⑤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관련기관 등을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간 제1항에 따라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동물보호센터의 시설기준, 지정기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지정절차 및 보호조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16조(신고의무) ①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할 수 있다. 1.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대 받는 동물 2. 유실·유기동물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그 직무상 제1항에 따른 동물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2조제7호에 따른 영업자와 그에 고용되어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2.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의 임원 및 회원 3. 제15조제1항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관련기관 등의 장 및 그 종사자 4.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험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 5. 제26조제2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으로 위촉된 자 6.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은 자

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생략) ②시장·군수가 보호조치를 한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7.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 동물병원의 장 및 그에 고용되어 관련 영업에 종사하는 자 ③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어야 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7조(공고) ①시·도지사는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제22조에 따라 입양될 수 있도록 제1항과 같이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의 기간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 그 동물이 제23조에 따라 인도적으로 처리되는 날의 전일까지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18조(동물의 반환)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1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등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로 확인되어 동물 소유자등의 연락처를 알 수 있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등이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동물의 소유자가 제19조제1항에 따라 보호비용을 부담하고 그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신 설>	제19조(보호비용의 부담) ①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치

	<p>료·보호에 소요된 비용(이하 “보호비용”이라 한다)은 그 동물의 소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적용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보호비용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 ② (생략)</p> <p>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가 있는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유실물법」 제12조 및 「민법」 제25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해당 시·군·자치구(이하 “시·군”이라 한다)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다.</p> <p>④ ~ ⑥ (생략)</p> <p><신 설></p>	<p>제20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지방자치단체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제17조제1항에 따라 처음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경우</p> <p>2.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동물을 처음 보호한 날부터 10일이 경과하여도 소유자가 보호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한다)</p>
<p><신 설></p>	<p>제21조(보호비용의 면제)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20조제2호에 따라 그 동물의 소유권을 포기한 경우에는 제19조제1항에 따른 보호비용의 부담을 면할 수 있다.</p>
<p>제9조(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 ① ~ ③ (생략)</p> <p>④시장·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군에 소유권이 귀속된 동물을 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군의 조례가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p>	<p>제22조(동물의 입양·기증)</p> <p>①시·도지사는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관리될 수 있도록 동물애호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한해 입양시키거나 기증할 수</p>

<p>출 자에 한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p> <p>⑤시장·군수는 소유자등 또는 분양받은 자에 대하여 보호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p> <p>⑥보호조치의 방법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경비의 산출 그 밖에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있다.</p> <p>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동물을 입양하거나 기증받은 자에게 불임수술 및 적정한 사육·관리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p> <p>③제1항에 따른 입양·기증 요건 및 절차, 제2항에 따른 조건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p>
<p><신 설></p>	<p>제23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운영자는 질병 등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2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하여 보호하고 있는 동물을 농립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는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p> <p>③ 제2항에 따라 발생한 동물의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1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 ⑤ (생략)</p> <p>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 중(種)의 건강, 질병 관리연구 등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p>2. 맹도견·안내견 등 인간을 위하여</p>	<p>제3장 동물실험윤리위원회</p> <p>제24조(실험금지 동물)</p> <p>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 중(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립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에 있는 동물을 포함한다)</p> <p>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p>

<p>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p>	<p>른 장애인 보조견, 군견 등 사람과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p>	<p>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p> <p>③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시설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p> <p>④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 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⑥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실험시설에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어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제25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등록)</p> <p>①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6조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기준 이하의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등록할 수 있다.</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위원회의 폐지·휴지 또는 그 운영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삭 제)</p>	<p>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생 략)</p> <p>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3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동물실험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해당 동물실험시설과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반드시 각각 1인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6조(위원회의 구성)</p> <p>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p>

<p>1. 「수의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수의사</p> <p><신 설></p> <p>2.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3.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수</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동물보호·복지를 담당하는 교수</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에서 호선한다.</p> <p>1.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로 동물에 대한 진료와 치료를 3년 이상 수행한 자</p> <p>2. 동물실험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 분야에서 3년 이상 있었던 자</p> <p>3. 제4조제2항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자격기준에 적합한 자</p> <p>4.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법학이나 동물보호·복지를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있었던 자</p> <p>5.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5년 이상 있었던 자</p> <p>③위원회에는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p> <p>④제2항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에 종사하거나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과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p> <p>⑤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p>
<p>제14조(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설치 등)</p> <p>① ~ ③ (생 략)</p> <p>④위원회의 심의대상인 연구·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개발 또는 이용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3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하며,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p>	<p>제27조(위원회의 운영)</p> <p>①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 등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②위원회는 동물실험이 제11조의 원칙에 부합하게 시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또는 종사자에 대하여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p>

<p>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⑥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지도·감독의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신 설></p>	<p>치를 요구할 수 있다.</p> <p>③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그 밖에 위원회의 기능·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28조(위원회의 구성 등에 대한 지도·감독) ①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해 농림수산식품부령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의 내용·대상·시기·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령은 위원회가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구성·운영되고 있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를 등록한 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당해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대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p> <p><신 설></p>
<p><신 설></p>	<p>제4장 동물복지농장의 인증</p> <p>제29조(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의 인증)</p> <p>①농림수산식품부령은 「축산물 가공처리법」에 따른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되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축산농가를 동물복지형 축산농장(이하 “동물복지농장”이라 한다)으로 인증할 수 있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령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된 축산농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p>

	<p>다.</p> <p>1. 동물의 보호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축사시설 개선에 필요한 비용</p> <p>2. 동물복지농장 환경개선 및 경영에 관한 지도·상담 및 교육</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동물복지농장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p> <p>1.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p> <p>2.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p> <p>3. 이 법 또는 「축산법」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거나 형벌 또는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동물복지농장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축산단체, 동물보호단체는 동물복지농장의 운영사례를 교육·홍보에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p> <p>⑤동물복지농장의 인증기준 및 신청절차 등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신 설>	<p>제30조(인증의 유효기간) ①제29조제1항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2년으로 한다.</p> <p>②제1항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p>
<신 설>	<p>제31조(인증의 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다.</p> <p>1.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그 농장을 계속하여</p>

	<p>운영하려는 상속인</p> <p>2.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그 사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p> <p>3. 법인인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가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p> <p>②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③제2항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제5장 영업</p>
<신 설>	<p>제32조(영업의 종류 및 시설기준 등) ① 다음 각 호와 같은 등록대상동물과 관련된营业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p> <p>1. 동물생산업</p> <p>2. 동물수입업</p> <p>3. 동물판매업</p> <p>4. 동물장묘업</p> <p>②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의 세부종류와 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제15조 (동물판매업·동물장묘업의 등록)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을 판매의 목적으로 생산 또는 수입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업(이하 "동물판매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p> <p>②동물전용의 장례식장·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이하 "동물장묘시설"이라</p>
	<p>제33조(영업의 신고) ①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營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p>

한다)을 설치·운영하는 업(이하 "동물장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④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재개업 또는 폐업하거나 등록사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취소된 업종과 같은 업종을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벌금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⑥「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할 수 없다.

1.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2.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제34조(영업의 등록) ①제32조제1항 제4호에 따른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휴업 또는 그 영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제32조제1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2.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또는 금치산자인 경우

3. 제38조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가 다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

<신 설>

제16조(준수사항) ①제1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판매업자는 일정한 월령(월령) 이상의 동물을 판매하는 등 동물판매업의 운영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②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한 동물장묘업자는 동물장묘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4.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해당하는 지역에 동물장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제35조(영업의 승계) ①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30일 이내에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승계에 관하여는 제33조제3항 및 제34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3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삭 제)

<p>지켜야 한다.</p> <p>제17조(교육) ①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이하 "동물판매업자등"이라 한다)와 그에 고용되어 영업에 종사하는 자(이하 "종업원"이라 한다)는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를 위한 조치사항 등에 관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②동물판매업자등은 그 종업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신 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비용의 납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21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는 동물판매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것이 판명된 때 2. 제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을 	<p>제37조(교육) ①제3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려는 자와 그 영업행위를 하다 제38조에 따른 처분을 받은 해당 영업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p> <p>(삭 제)</p> <p>②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로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는 그 영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③제1항에 따라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자가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 중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다.</p> <p>④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p> <p>제38조(등록취소 등) ①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p>위반하여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 등의 행위를 한 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휴업·재개업·폐업의 신고 또는 등록사항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7.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p><신 설></p> <p>②시장·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신 설></p> <p>제20조(출입·검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하여 학대행위를 하는 등 이 법을 위반하거나 공중위생상의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학대행위의 중지 및 위해방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여도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4. 제32조제1항에 따른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5. 제33조제2항 및 제3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6. 제3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때 <p>(삭 제)</p> <p>②제1항에 따른 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양수인등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는 양수인등에 대하여 처분의 절차를 행할 수 있다. 다만, 양수인등이 양수·상속 또는 합병시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③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p> <p>제6장 보칙</p> <p>제39조(출입·검사 등)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의 보호 및 공중위생상의 위해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동물의 소유자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동물현황 및 관리실태 등 필요한 자료제출의 요구 2. 동물이 있는 장소에 대한 출입·검사 3. 동물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의
--	--	---	--

<p>지대책의 강구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p>	<p>이행 등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시정명령</p>
<p><신 설></p>	<p>②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관련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신 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등에 출입하여 운영실태를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p> <p>1. 제15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의 장</p> <p>2. 제25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p> <p>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으로 인증 받은 자</p> <p>4.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른 영업자</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가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p>	<p>④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하는 때에는 출입·검사 개시 7일 전까지 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출입·검사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출입·검사계획을 미리 통지할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입·검사를 착수할 때에 이를 통지할 수 있다.</p>
<p>1. 출입·검사목적</p> <p>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p> <p>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p> <p>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p> <p>5. 제출할 자료</p> <p><신 설></p>	<p>1. 출입·검사목적</p> <p>2. 출입·검사 기간 및 장소</p> <p>3. 관계 공무원의 성명과 직위</p> <p>4. 출입·검사 범위 및 내용</p> <p>5. 제출할 자료</p> <p>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출입·검사 등을 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p>

<p>제19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보호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②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감시와 학대받는 동물의 구조·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민간단체가 추천하는 자 그 밖에 동물보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동물보호명예감시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p>	<p>제40조(동물보호감시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4조 및 제39조에 따른 직무와 그 밖에 동물보호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동물보호감시관을 지정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자격·임명·위촉 및 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삭 제)</p> <p>②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감시관의 자격·임명·직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④동물보호감시관 및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⑤동물학대의 신고를 접수한 동물보호감시관은 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동물학대행위자로부터 피학대동물을 격리하여 동물보호전문기관에 인도하거나 그 동물의 치료가 필요한 때에는 치료기관에 인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③동물보호감시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삭 제)</p>
<p><신 설></p>	<p>제41조(동물보호명예감시관)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동물보호 등을 위한 지도·계몽 등을 하기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관(이하 “명예감</p>

	<p>시판”이라 한다)을 위촉할 수 있다.</p> <p>②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관의 자격·위촉·직무·활동범위와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③명예감시관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p> <p>④명예감시관이 그 직무를 단독으로 수행하려면 미리 농림수산식품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p> <p>⑤명예감시관이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단독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가지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p> <p>⑥명예감시관이 제2항에 따른 직무를 행하는 때에는 누구든지 동물특성에 따른 출산,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p>
<p>제22조(수수료) 시장·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증을 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p> <p>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p> <p><신 설></p> <p><신 설></p> <p><신 설></p> <p>2.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이하 “동물판매업등”이라 한다)의 등록 또</p>	<p>제42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수산식품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p> <p>1. 제13조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p> <p>2. 제25조제1항에 따라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등록하고자 하는 자</p> <p>3. 제29조제1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p> <p>4. 제30조제2항에 따라 동물복지농장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자</p> <p>5. 제33조제1항 및 제34조제1항에 따라 영업의 신고·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p>

<p>는 등록한 사항의 변경신고</p> <p>제23조(권한의 위임) ①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②시·도지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시장·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신 설></p>	<p>제43조(권한의 위임) (현행과 같음)</p> <p>②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p> <p>제44조(실적보고) ①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1.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p> <p>2.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p> <p>3.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p> <p>②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 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등에 관한 실적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p> <p>③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동물보호업무와 관련된 지도·단속 실적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p> <p>제24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p> <p>제45조(자료 유지 및 정보의 공개) (현행과 같음)</p>
---	---

정보와 자료를 수집·분석하고 그 결과를 매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1. 제13조에 따른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에 관한 사항
2. 제9조 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유기동물 및 보호시설과 위탁 보호시설에 관한 사항	2. 제14조부터 제23조까지 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와 유실·유기동물 등의 치료·보호 등에 관한 사항
3.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	3.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해당하는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4. 제29조에 따른 동물복지농장 인증현황 등에 관한 사항
4.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동물판매업 등의 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5.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영업의 신고·등록과 운영실태에 관한 사항
<신 설>	제7장 벌칙
제25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6조(벌칙) ①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	(삭 제)
2. 제14조제6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동물판매업등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33조제1항 또는 제34조제1항에 따른 신고·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등록을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3조제6항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제24조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6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47조(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	1. (현행과 같음)

물을 유기한 자		
<신 설>		2. 제23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의사법」에 따른 수의사가 아니면서 동물을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한 자
2.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설의 장		3. 제2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등록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25조제3항에 따른 변경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5. 제28조제3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복지농장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신 설>		7.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7조의 규정에 따른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로서 그 영업을 한 자
5. 제2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9. 제3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자
6. 제2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10. 제3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2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1.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2. 제39조제3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4. 제19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동물보호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13.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의 직무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 (현행과 같음)
1. 제6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1.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시키지 아니한 자

<p>2. <u>제6조제5항의 규정</u>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이하 "처분청"이라 한다)</u>가 부과·징수한다.</p> <p>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청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p> <p>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처분청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p> <p>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p> <p><u>⑦2제5조제4항 또는 제6조제6항의 규정</u>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p>2. <u>제12조제2항</u>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자</p> <p>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u>시장·군수·구청장이</u> 부과·징수한다.</p> <p>(삭 제)</p> <p>(삭 제)</p> <p>(삭 제)</p> <p><u>④제12조제3항 또는 제13조제4항</u>에 따른 조례에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p>
--	--